

보평초 학생생활인권규정 초안에 대한 의견

-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1. 전체 구성에 대한 의견

- 이 규정의 이름은 '학생생활인권'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내용에 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 뭔지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규정은 학생의 인권보다는 학생의 의무 규정에 가까워보입니다.
- 총칙에서 이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을 규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의 대상은 학생을 주로 향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보호자에게도 학생의 의견을 존중할 책임과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해 협력해야 할 책임을 부여하기보다는 학생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책임은 어떨습니까?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학교가 어떤 지침을 갖고 살피고 노력해야 할지를 규정하기보다는 학생을 관리해서 '지도'할 수 있는 '권한'만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 학생생활이 인권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려면 학생의 의견 존중, 참여의 보장이라는 큰 원칙 하에서 규정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학생이 의견을 존중받고 학교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생에게 부여될 책임은 △자기의 권리를 알고 행사할 책임 △타인의 인권과 학습권을 존중할 책임 △차별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책임 △학교운영에 적극 참여할 책임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물을 훼손하지 않고 소중히 다룰 책임 정도 이겠지요. 도난문제 해결은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기본 법규로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인데 굳이 학교생활규정에 담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 전체적으로 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먼저 명시하고, 그 다음에 학생이 익혀야 할 책임이 뒤에 배치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권리의 장을 따로 둘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각 조항에서 먼저 학생의 권리를 명시하고, 이에 따른 학교와 교직원의 책임을 명시하고, 뒤이어서 학생의 책임을 제시하는 기술 방식을 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 세부 내용에 대한 의견

- 3조 적용근거 : 적용근거에 헌법과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함께 명기될 필요가 있습니다.

- 9조 교우관계 : 동급생, 상하급생 간에 예의를 지킨다는 이름으로 폭력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인 관계가 학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급생, 상하급생 간에 서로를 존중한다는 표현이 낮지 않을까요?

- 12조 여가활동 : 여가시간은 학생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벗어난 시간입니다. 여가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규정하는 것 자체가 '쉼 권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 13조 용의복장 :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함, 혐오감 등은 매우 주관적이고 모호합니다. 모호한 규정은 권한의 남용을 불러옵니다. 어떤 색깔로 염색하면 혐오감을 주는 것입니까? 누구에게는 예뻐보이는 색깔이 누구에게는 불쾌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가치관이 충돌하는 문제를 규정에 끌어들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신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 또한 그렇게 되기 힘든 조건에 놓여있는 학생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는 조항입니다. 청결 상태가 불량한 학생은 무언가 도움과 교육적 손길이 필요한 학생일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교육적 돌봄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지, 학생에게 의무를 부과한다고 해결되는 것일까요?

- 15조 기타 교내생활 : 학생들의 자발적 모임이나 의사표현은 '허가'받아야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신고절차'를 마련해 신고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신고절차를 따로 두는 이유는 다른 학생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사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겠지요.

- 19조 교외생활 : 학교 밖 단체나 대회에 참여, 방문할 때 학교장의 승인이나 허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정규교과 시간 중에 한다면 모를까 모든 교외생활에 대해 학교장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학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입니다.

- 20조 보호자의 의무 : 이것은 보호자의 의무라기보다는 보호자의 권리가 아닐까요? 학생(자녀)의 상태에 대해 학교와 상담할 권리를 갖는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더구나 학생의 외출, 귀가시간, 교우관계 등에 대해 보호자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좋겠지만, 그것을 '의무'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 21조 정보통신생활 : 핸드폰의 소지와 이용은 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하고 있는 학생의 권리입니다. 학부모의 사용 동의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핸드폰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수업시간 중 사용에 대해서만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 규칙을 어길 경우 주의를 주면 되는 것이지 '압수'는 과도합니다. 반복적으로 어졌다 하더라도 소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 22조 안전지도 : 학교가 학생의 안전을 위해 취해야 할 안전 조치나 관리 책임이 좀더 상세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반면 학생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매우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안전’이 ‘권리’라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세세하게 규정하기보다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시설 책임자나 교직원이 말아야 할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29조 선도위원회 사안 : 욕설, 수업 방해 정도로 선도위원회가 소집되어야 할까요? 선도위원회에 회부된다는 것 자체가 학생에게 낙인과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게임이나 인터넷 중독의 경우도 그에 따른 합당한 치유 조치가 취해져야 할 텐데, 그를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의와 협력이 필요하지 선도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30조 절차와 31조 재심 : 학생이 보호자 또는 대리인을 통해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재 절차에는 그러한 권리 행사 절차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재심권이 ‘학교장’에게 부여되어 있는데, 학교장은 재심을 수용할 의무 주체이지 재심을 요청할 권리 주체가 아닙니다. 재심에 대한 요청권은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 34조 개정방법 : 학생의 발의권을 보장한 것은 매우 훌륭합니다. 그런데 교원이 발의할 경우 학생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직교원 2/3 이상이 출석한 자리의 이름이 ‘학생선도위원회’로 불리는 것이 온당할까요? 교직원회의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현재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교별로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그 구성의 요건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 규정에 비추어볼 때, 보평초의 규정 개정 절차는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게다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학교장의 독단으로 유보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 4장 개정방법 : 다시 읽고 나니, 34조에서 규정한 개정방법은 전체 학생생활규정이 아니라 선도규정만을 의미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중적 절차를 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규칙(학칙)을 포함하여 학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 규정을 앞에서 언급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규정 개정을 교직원회의에서만 다루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